與 세종시 드라이브 가속도

당·정·청 7인 회동 "논란 장기화 도움 안돼" 수정안 앞당겨 연내 마련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 축소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여권은 9일 애초 내년 1월 최종안을 제시하려던 계획을 1개월 앞당겨 연내 수정안 마련해서 내년 초에 세종시 논란을 종결시키기로 하고 이번 주부터 당·정·청 연쇄 접촉을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대국민 여론 수렴 및 설득, 친박(친박근혜)계 접촉 등 다각적인 대응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 같이 여권이 세종시 수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논란의 장기화가 여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여권의 구상은 전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7인 모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정운찬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호영 특임장관 등 당·정·청 수뇌부 7인은 비공개 회동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일 세종시 수정안 연구기간을 최대한 단축, 연내에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관계 연구기관들에게 주문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현오석 KDI원장, 박응격 한국행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 연구는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자족기능 보완방안과 행정효율화 개선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많이 돼 있었다"며 "정부와 민간에서 제시한 여러 대안의 현실성을 검증하고 연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정은 또 오는 1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연내 대안을 내놓기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정 총리가 중심이 된 민관합동위원회에 참여할 15명 가량의 민간위원 인선을 금주중 완료하고 오는 16일 첫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속한 대안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당 차원에서도 이번 주 발족할 '세종시 여론수렴특위(위원장 정의화)'를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대국민 여론수렴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정두언·정태근·권택기 의원 등 친이(친이명박) 직계를 비롯한 친이계 의원들도 잇단 모임을 갖고 세종시 수정을 관철하는 위해 적극 앞장선다는 데 뜻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세종시 TF, 당이 알아서 할 일"

박근혜 전 대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9일 세종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내 설치된 '세종시 특위'의 친박(친 박근혜)계 참여 문제에 대해 "제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에 앞서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박의 한나라당 특위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전 대표는 또 특위구성과 관련한 전날 자신과 정몽준 대표 간 통화 내용이 언론에 잘못 보도됐다면서 정 대표 측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정 대표가 전화해 TF팀(특위)을 얘기하시길래 '그것은 저랑 상의하실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엉뚱한 보도가 됐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동교동계 오늘 하의도서 뭉친다

권노갑·김홍업 등 100여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가 10일 신안 하의도에서 단합을 과시한다.

9일 동교동계 대변인인 장성민 전 의원에 따르면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을 비롯해 한화갑·김옥두·한광옥·최재승·윤철상·장성민·한영애·설훈·이훈평 전 의원 등 동교동계 100여명이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하의도를 방문한다. 이날 방문에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도 참석한다.

장 전 의원은 "지난 국장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하의도 주민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DJ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하겠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김 전 대통령을 모시던 비서진과 전직 의원들이 함께 방문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 서울을 출발해 11시께 목포를 걸쳐 신안 하의도로 들어간다. 하의도에서 주민들과 점심식사를 한 뒤 김 전 대통령의 생가와 모교인 하의초등학교를 방문, 관계자들과 학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동교동계 인사들은 '하의도 단체 방문'과 관련해 최근 모임을 갖고 권 전 고문을 동교동계 좌장이 아닌 동교동계 '보스'로 추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에서는 이같은 동교동계의 대규모 하의도 방문에 대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교동계가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교동계가 단합을 과시해 민주당 내 세력을 형성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파 인사들을 대거 출마시킨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플루 백신 접종 위탁기관 왜 수도권 집중됐나"

여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여야는 9일 교육,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복수노조 허용과 비정규직 대책 등 노동현안, 신종플루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안이 13년간 유예된 만큼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야당은 현 정부가 노동자 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노동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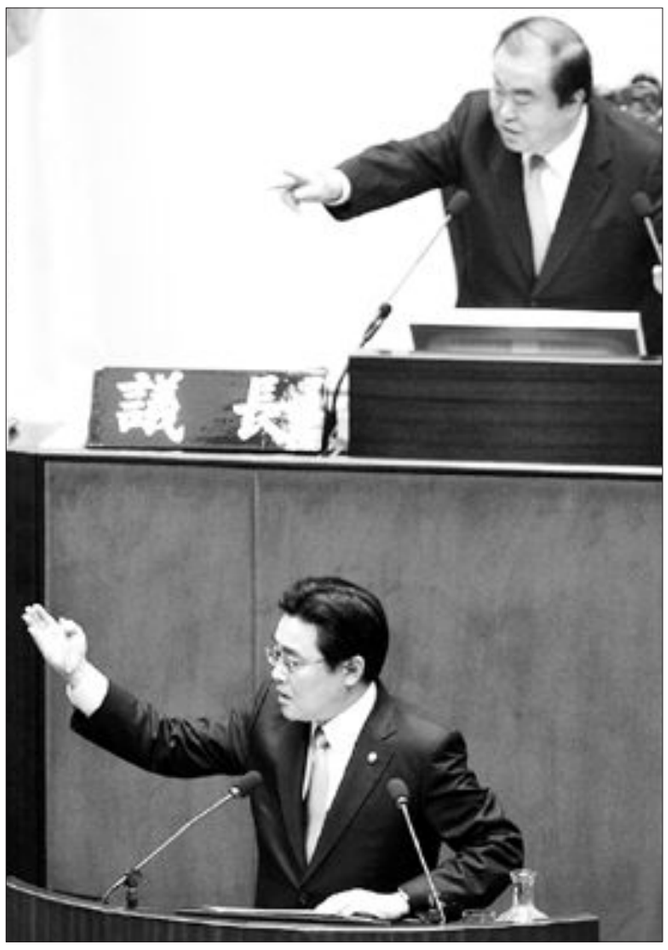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전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13년 동안 시행하지 못하고 유예상태로 끌어온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며 "이제라도 노동관계법을 예정대로 시행해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위해 정부가 선정한 위탁의료기관 수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며 "위탁기관 3천780곳 중 51%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4개 광역시의 위탁기관은 5.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10·28 재·보궐선거 이전에 신종플루는 급격한 확산속도를 보였으나 정부가 재보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고의로 재난등급 격상시기를 지연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정부는 신종플루 유행방지를 위해 공중보건의 1명당 무려 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단체접종을 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비난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희상 국회부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종플루 재난등급 격상 시기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자 중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 오늘 국민참여당 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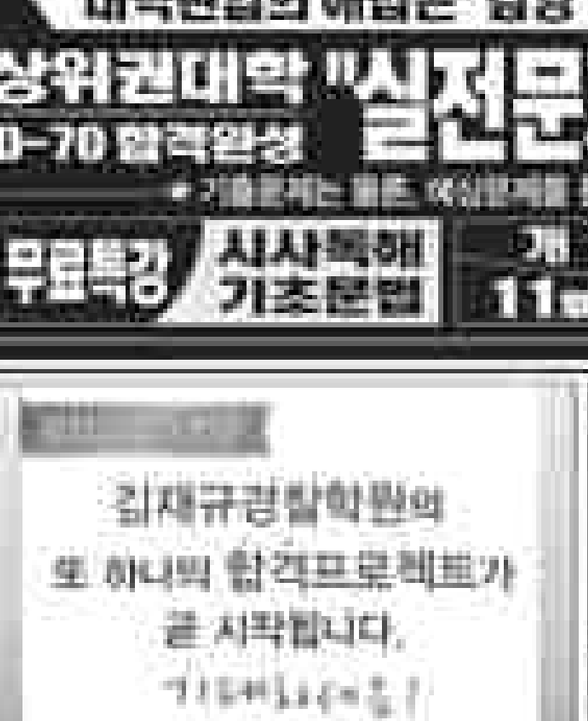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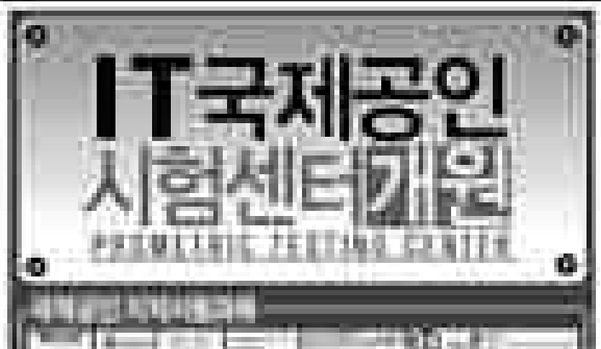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친노신당'인 국민참여당에 공식 입당한다.

9일 국민참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유 전 장관이 10일 오전 10시, 마포구 창전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당을 선언한다.

유 전 장관은 당분간 평당원으로 활동하되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또는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한편, 국민참여당은 오는 15일 서울 종로구 수운동에서 창당준비위 결성식을 갖는데 이어 내년 1월17일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학편입의 해법은 "김영" - www.kimyoung.co.jr
상위권대학 "실전문제풀이반" 大특강
D-70 합격완성
무료특강 시사독해 기초문법 개강 11월 9일
김영 편입학원

김재규경찰학원의 또 하나의 합격프로젝트가 곧 시작됩니다.
광주김재규경찰학원